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방향

성기태 | 총주대 총장

I. 서론

오늘날 정원의 미충원, 학생 질의 저하, 낮은 취업률, 대학 기능의 상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과제가 되고 있다. 새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모든 분야의 집중화 현상은 대학의 집중, 우수학생의 집중을 가져와서 지방대학 학생의 질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는 낮은 취업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의 왜곡, 연구능력의 상실, 산학 연계의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 이념, 목표 및 전략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II. 대학정책 기본이념의 재고

오늘날 교육정책 분야에 최선의 이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

의적 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대학 설립의 완화에 의한 지속적인 대학 신설, 정원 확대, 경제원리에 입각한 재정지원의 차등화, 계약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힘의 논리와 정치논리에 의한 지원과 정책 왜곡이 추가되어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체제가 규모의 경제나 단순한 경쟁논리에 의하여 운영된다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결코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요구된다.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에 존재하는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면이 있음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방향

1. 계층제에서 네트워크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20세기 계층제적 사회를 네트워크의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오늘날

지방대학의 위기는 교육체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 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발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사회 부분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방안도 사회의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 경제가 낙후되고, 산업체가 없는 지방에서의 산학협력에 의한 대학 특성화 전략은 허구에 지나지 않고, 일자리가 없는 지방에서 지방대학은 서울을 위한 인력공급처의 역할만을 할 뿐이며, 사회적 비용만을 증대시킬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세부과제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지방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로 추진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논의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의 분산화와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종합국토개발계획, 경제 및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등을 수립할 때 반드시 교육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앞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확대에서 축소로

오늘날 대학교육의 정체성이나 지방대학의 위기는 1980년대 이후 대중고등교육사회를 추진한 양(量) 중심의 확대 일변도 대학정책에서부터 내재된 필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 및 대학의 문제를 경쟁의 원리에 의거 대학과 학과의 퇴출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시각은 교육문제를 학생들의 희

생과 많은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을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대학을 통합하고,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국 대학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10~20% 정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하여 은행식 정원관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원 감축에 의한 재정적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대학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광역권의 지역 및 산업발전에 맞는 특성화 분야에 인력양성을 위한 소규모 대학 설립을 유도하고, 중복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의 신설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지역대학 협의체 등의 심의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3. 투입에서 성과로

단순히 이공계 지원자에 대한 장학금 확대, 연구비 지원 확대와 같은 투입보다 대학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구조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생의 취업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지향의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지방대학생의 의무채용제 실시, 5급을 포함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여성고용 목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 대전대학교의 군사학과와 같이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지방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은 지방대학 육성에 있어서 성과와 관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기조를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는 사업체나 조직에 대하여 각종 세금 감면,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투입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많은 교육 지원 정책은 BK21 사업과 같이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이 혜택을 입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방대학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재정 지원과 같은 대학의 투입 정책은 경쟁력이 있는 대학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학이나 경쟁력이 없는 건실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4. 통제에서 자율로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가지는 특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지방대학이 가지는 특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대학의 특성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는 경우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한 예로 과거에 정부의 권고사항을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대학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상한 대학과 비교하여 현격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대학의 특성화는 학문 분야의 특성화, 교수의 특성화, 학생의 특성화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모든 대학에 동일한 학과를 개설하고 특성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지방에만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인기 학과인 의학, 한의학, 법률 및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을 지방대학에 신설한다면 우수 인력의 지방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도 학부정원의 축소와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산·학·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